

가전·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나선다

광주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국비 29억원 등 39억원 투입...2개 프로젝트 7개 세부사업 추진

광주시가 잠재한 가전·뿌리산업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강화에 나선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29억원 포함 총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하고, '지역혁신프로젝트'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등 2개 프로젝트,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산업 및 노동시장 특성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것으로, 광주시는 108개 기업의 성장 지원과 함께 400여명의 고용 창출·유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최근 대우위니아 사대로 축

발된 지역 가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대우위니아 협력업체 등 가전기업과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에는 총사업비 27억원(국비 19억원, 시비 8억원)을 투입하고, ▲가전 전환 지원(기업 컨설팅) ▲가전기술 고도화 지원(기술이전 지원, 재직자 교육훈련) ▲가전 마케팅 지원(제품 브랜딩, 판로 개척) ▲내일전환지원센터(위기근로자 지원, 기업홍보, 취업지원, 교육훈련) ▲고용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광주시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광주시는 또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뿌리기업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형 플러스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일자리 도약장려금(기업지원, 고용장려금), 일자리 채용 지원금(근로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12억원(국비 10억원, 시비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은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대표 수행기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광주디자인진흥원·광주경제진흥원·광주생일자리재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우위니아 사대로 발생한 지역 가전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성장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지원 정책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직원들과 현장대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광산구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개발공사 30억 규모 지방소멸대응펀드 조성

청년·신혼부부·중소기업 등 지역 정착 소요 자금 저금리 대출

전남개발공사가 30억원 규모의 '전남지방소멸 대응펀드'를 조성해 전남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신혼부부, 중소기업 등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펀드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지원해왔던 전남개발공사가 수혜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것이다.

1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IBK기업은행과 함께 '전남지방소멸대응펀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타 지역에서 전남으로 이전하는 중소

기업과 전남 거주 청년·신혼부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남개발공사 예탁금 30억원을 재원으로 청년층과 전남 이전 기업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소모자금을 저금리로 대출(3.09% 이하 감면)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남 이전 중소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전남 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전남 거주 청년(만 19~45세 이하) 자영업자 ▲전남 거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자영업자

이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 1억원, 청년 3000만원, 신혼부부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또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1%인 3000만원은 다자녀 가정의 주거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억원(전남행복동행펀드), 2022년 30억원(전남드림ESG펀드) 예탁으로 조성한 5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현재 운영하면서 그동안 전남 소재 150개 중소기업에게 대출금리 평균 3.6%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천동 일대 지하 도시철도 건설되나

시, 7km 건설 사업비 6000억 예상 3단계 구간·사업 우선 순위 논란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도심 개발에 따른 광천동 일대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지하철) 건설을 검토하고 나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이미 해당지역이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휴일이면 심각한 차량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교통 폭증을 감당할 유일한 대안은 사실상 교통 지하화 뿐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다, 후순위로 밀린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백운광장~효천역)과의 사업 우선 순위 논란 등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상무역-시정-기아차-광천터미널(광주신세계)-옛전방-일신방직부지(더현대 광주)-KIA 챔피언스필드-광주역 7km구간을 단선 도시철도(지하철)로 잇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예상 사업비는 6000억원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는 정부 승인 시 국비 60% 지원이 가능한 만큼 나머지 40%인 2400억원은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자가 내놓는 공공기여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2년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농성역-광천터미널-전방-일신방직터-기아 챔피언스필드'까지 2.6km 구간에 시비 720억

원을 들여 '수소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보류했으며, 이후 서구 광천동과 북구 임동 일대를 '수소 트램'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미 교통·유통·여가 시설 등이 집중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광천동·임동 일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도심 교통까지 연쇄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다양한 교통 대책을 고민해왔다.

실제 광천동 일대에선 광주신세계가 금호고속으로부터 유스퀘어문화관,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기존 백화점보다 3배 이상 큰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조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다.

또 광천동과 맞닿아 있는 임동지역은 KIA 챔피언스필드가 자리 잡은 곳으로 프로야구가 열리는 날에는 일대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더현대 광주'와 49층 특급호텔, 4000여세대 규모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천동·임동 일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도로 확장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교통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당 구간은 교통 수요가 많은 터미널과 백화점, 야구장 등이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공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도 경제성이 충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시,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모집

광주시는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자동차 3149대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다. 사업용 자동차

와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제외다.

인센티브는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2024년 10월 말)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18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기간 중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하수도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금 신청

국고 6461억 포함 총 1조683억원 규모...하수도 보급률 높이기 총력

전남도가 놓여온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2025년 국고 646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조683억원 규모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전남도는 시·군별로 제출받은 10개 사업 289개소에 대해 환경부의 국비 예산 신청 대상 및 편성 기준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재이용관리 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주민 생활편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를 반영해 신청 사업을 검토했다.

주요 신청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2029억원, 하

수처리장 확충 684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068억원, 도시 침수 대응 976억원,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임대료 277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196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3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하수도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국지성 강우에 대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 발굴에 집중했다. 올해 전남도 하수도 예산은 2023년(3천482억원)보다 2천174억 원(62%) 늘어난 5천65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윤현석 기자 chadol@

